

● [법과 정치]

1. 집단 현상설과 국가 현상설 (2점) [정답] ④

국가 기관의 활동 이외에도 노사 갈등이나 총학생회 선거 등을 정치 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집단 현상설이다. 집단 현상설은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ㄱ, ㄴ, ㄷ, 국가 현상설의 관점에 부합한다.

2. 스위스의 직접 민주제 (2점) [정답] ③

말쭉 친 ‘국민 제안 제도’는 국민 발안에 해당하는 직접 민주제의 하나이다. ③ 중우 정치의 가능성은 직접 민주제가 가지는 단점에 해당한다.

3.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 (2점) [정답] ⑤

권력 융합적이고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다른 사람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내각의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가지는 특징이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날 수 없다.

4. 대표 결정 방식의 비교 (3점) [정답] ④

같은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을은 다수 대표제, 병은 소수 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ㄱ,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서는 선거구가 하나이다. 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ㄷ, 선거구 내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는 소수 대표제를 채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 해당한다. ㄹ, 다수 대표제는 다수당에 유리하므로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어렵게 한다. 비례 대표제나 소수 대표제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5. 청소년의 법적 지위 (3점) [정답] ②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한 갑은 15세 미만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단독 유언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한 병은 17세이고, 단독 유언과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을은 18세이다. ㄱ, 갑이 14세인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ㄴ, 18세인 을은 부모가 동의하면 혼인을 할 수 있다. ㄷ, 병은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덕상·보건상 유해한 업종에서의 근로가 금지된다. ㄹ, 을과 달리 병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실질적 법치주의 (2점) [정답] ⑤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법의 내용이 인간 존엄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국민의 의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예고나 공청회, 정치권력의 행사에 대한 위헌 심사제 도입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려고 한다.

7. 기본권의 이해 (2점) [정답] ②

방어적 권리이자 소극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는 A는 자유권이고, 적극적 권리·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는 B는 청구권이며, 적극적 권리이자 정치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는 C는 참정권이다. 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에 속한다.

8.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3점) [정답] ②

①, ③ K군은 13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K군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K군은 13세로 중학생이다. 중학생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으므로 퇴학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K군의 방화로 피해를 입은 해당 초등학교는 K군 부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

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 보호 사건을 심리한다.

9.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 (2점) [정답] ③

A는 대법원, B는 헌법 재판소이다. ① 특허 재판은 2심제이며, 특허 법원이 1심 법원이 된다. ② 위헌·위법 명령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③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모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0. 권력 분립 원리 (2점) [정답] ②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권력 분립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국가 권력을 복수의 국가 기관에 분산시켜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치 원리이다. 이는 입헌주의 정치 원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며, 우리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② 의원 내각제보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상대적으로 권력 분립 원리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11.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효과 (3점) [정답] ①

(가)는 미성년자, (나)는 피한정 후견인, (다)는 피성년 후견인이다. 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 법률 행위를 해야 하는 제한 능력자는 피성년 후견인이다. ③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단독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⑤ 일용품의 구입과 같은 일상적이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피성년 후견인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2.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 (3점) [정답] ⑤

ㄱ, 명예 회복 제도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죄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ㄴ, 배상 명령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A, B군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 ㄷ, A, B군은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A, B군에게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포승줄로 묶은 상태에서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부당 해고의 요건과 구제 절차 (2점) [정답] ⑤

을의 행위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부당 노동 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한 경우를 말한다. ①, ② 갑은 해고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의 제기를 통해 부당 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③, ④ 을의 해고 처분은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14. 국민 참여 재판 (3점) [정답] ①

①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이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맥을 통해 볼 때, (가)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절하다. ② 피고인의 지위

에서 제기한 헌법 소원이므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국민 참여 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의 하나이다.

15. 재판상 이혼 (3점) [정답] ①

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을, 정, L과 P의 부정한 행위는 K에게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K는 L과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P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L에 대해서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병, 가정 파탄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L은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16. 국제기구와 국제법 (2점) [정답] ①

① 세계무역기구는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②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은 경제적 약소국인 후진국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③ 유럽연합은 지역적 국제기구이다. ④ 자유무역협정은 조약이므로 체결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⑤ 시민 단체들이 자국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제 사회에서 정부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7. 특수 불법 행위 (3점) [정답] ④

ㄱ, 중학교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 재단의 사용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ㄴ, 지도교사 S와 P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S와 P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학교 재단의 배상 책임과 지도교사 두 사람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사용자 책임과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것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ㄹ,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중학교 지도교사가 초등학교 소속이 아니므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18. 유류분 제도 (3점) [정답] ③

ㄱ,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라도 날인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와 상속 관계가 모두 종료된다. ㄷ, 상속 1순위자인 직계 비속이 있으므로, 법정 상속에서 직계 존속인 무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ㄹ, 을, 병, 정 모두 ○○복지법인을 상대로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국제 연합 (2점) [정답] ③

(가)는 국제연합, A는 유엔 총회, B는 안전보장이사회, C는 국제사법재판소이다. ① 국제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④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1국 1표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상임 이사국에게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 결정 방식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⑤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

신유형

20. 선거 결과 분석 (3점) [정답] ④

ㄱ, 전체 의석률이 과반수인 정당이 없다. 따라서 갑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여소야대 정국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ㄴ, 지역구 선거에서 A, B당의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다. ㄷ, 각 정당의 전체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지역구 의석률에 가깝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제1당인 A당이 C당과 연립하면 2개 정당만으로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